



외국인 농업연수생 1,170명 6월 하순 첫 도착

- 해외연수생 입국후 90일 이내 외국인 등록
마쳐야

외국인농업연수생을 신청한 농업경영체는 최근 농협중앙회 산하 외국인농업연수협력단(단장 강대련)이 1,170명의 외국인농업연수생을 6월27일 연수업체에 인도키로 함에 따라 연수생의 효율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농업경영체는 먼저 송출기관으로부터 연수생을 인수하면, 연수생 입국 후 90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시에는 연수업체추천서사본,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반드시 연수생과 동행하여 지문 날인해야 한다.

또한, 농업경영체는 연수생이 인도되면 농업경영체 부담으로 의료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수생의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또 연수생에게 연수수당 지급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한 소득세와 소득할 주민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은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연수생의 이탈 또는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변동사유발생 신고서를 제출하고, 중앙회와 송출기관에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농업연수생 신청 양돈업이 '최다'

- 537명 신청해 전체의 42.6% 차지

양돈농가가 외국인농업연수생을 가장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가 고령화로 인한 농촌현장의 인력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 농가로부터 외국인농업연수생 신청을 받은 결과 총 439농가 1,260명 중 양돈농가가 537명으로 전체 42.6%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52농가 128명으로 가장 많이 신청했으며, 경기 30농가 81명, 경북 21농가 73명, 경남 28농가 62명, 전북 14농가 48명, 강원 11농가 42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축산업의 경우 양돈에 이어 산란계가 29농가 117명을 신청하였으며, 젓소가 43농가 72명, 육계 8농가 36명, 한육우 9농가 33명을 각

각 신청했다.

한편, 농협은 이번 신청인력이 저조함에 따라 외국인 농업연수업체를 추가로 접수받기로 했다.

배합사료 가격 인상 움직임 2.5~3%선 인상 검토

민간 배합사료업체들이 사료 값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옥수수 등 국제 곡물값 급등에 따른 원재료비 상승과 환율 강세로 배합사료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사료업계는 지난해 12월 톤당 110달러 안팎의 안정세를 보였던 옥수수 시세가 최근 들어 130불대로 상승·지속되고, 대두박 등도 지금까지 상승세를 유지해 원가 부담으로 작용하는 한편, 환율 역시 1천200원 안팎으로 인해 경영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재료값 상승에 민감한 OEM사료업체들의 경우 이미 이달부터 2.8% 안팎의 사료값 인상을 단행했으며, 일부 배합사료업체들도 평균 2.5~3%선에서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합사료 업체들 작년 장사 잘했다”

- 12월 결산 상장법인 순이익 급증

제 작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배합사료회사들이 전년에 비해 순이익을 많이 올리는 등 전반적으로 장사를 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증권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합사료회사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실적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울사료로 지난해 매출액은 1363억 3,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7% 급감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이익은 42억 3,300만원으로 전년 도 96억7,900만원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다.

또한 CJ와 대한제당, 제일곡산도 순이익이 1,072억7,000만원과 90억3,400만원, 43억2,300만원을 각각 기록해 전년보다 101.9%, 134.8%, 121.7% 각각 늘어났다.

이 밖에도 대상사료가 99.4% 늘어난 것을 비롯해 도드람 B&F 82.6%, 한일사료 71.5%, 제일사료 59.3%, 우성사료 48.9%, 선진 35.4% 늘어나는 등 대부분의 배합사료회사들이 많은 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종돈 50두 미만도 종돈장으로 등록해야”

- 농림부, 종돈장 등 종축업 방역관리 강화키로

농림부는 4월 18일 최근 종돈장에서 돼지콜레라 발생을 계기로 종돈장, 돼지인공수정센터 등의 등록요건 및 방역관리를 전반적으로 개선·강화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신고기준 이하인 종돈 50두미만 소규모와 위탁사육농장도 종돈업으로 등록토록 규정하고, 소독시설·장비, 격리사 설치 등 시설요건 강화, 씨돼지 분양시 혈통증명서 발급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돼지콜레라 방역정책 전환 추진

- 돼지콜레라 ‘발생축’ 및 ‘감염의심축만 살처분

농림부는 돼지콜레라 발생시 살처분 범위

를 돼지콜레라 '발생축' 및 '감염의심축'만 살 처분키로 했다.

농림부가 발표한 새로운 돼지콜레라 추가 방역지침에 따르면 돼지콜레라 발생시 그 동안 발생농장의 전 두수를 살처분하던 것을 '발생축' 및 '감염의심축'만으로 살처분 범위를 축소했다.

또한 돈방별로 필요시 추가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양성축이 발견되면 살처분하고, 발생돈방을 특별관리하여 임상증상이 나타날 경우 살처분키로 했다.

(주)농협무역, 한국냉장(주), (주)진주햄 돼지고기 수입 자제키로

(주)농협무역과 한국냉장(주), (주)진주햄이 CJ푸드시스템, 대한제당(주)과 함께 국산 돼지고기 수입자제에 동참키로 했다.

(주)농협무역과 한국냉장(주), (주)진주햄은 본회의 돼지고기 수입 자제 요청과 관련해 4월 18일, 24일, 29일 각각 돼지고기 수입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주)농협무역은 회신에서 "국내 양돈농가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최소수량에 한해서만 수입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국내 양돈농가를 위한 정책에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혀왔다.

또한 한국냉장(주)도 회신에서 "향후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확대를 도모하고, 돼지고기의 수입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주)진주햄도 "호텔납품용 베이컨 생산을 위해 매년 소량의 삼겹살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모든 돈육원료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소량의 삼겹살을 제외

한 나머지 돈육원료에 대해 수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본회는 3월 24일 양돈관련 9개 수입업체와 일반 육류수입업체 32개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 수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농어업인부채 상환기간 '3년 거치 7년 분할'로 연장

- 국회,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중개정법률안 통과

2001년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이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변경될 전망이며 농어가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년 6월부터 상환기일이 집중 도래하는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기간이 현행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지난 4월 30일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과 민주당 정철기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공포 후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농어가부채심사위원회가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상환연기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의 경우에 한해 그가 지원받은 농수산업경영개선자금에 대한 상환기간을 지원 받은 날부터 3년 거치한 후 7년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축산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적용 2008년까지 연장 추진

- 주진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올해 말 시한이 만료되는 축산용·농업용 등의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이 2008년까지 5년 연장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주진우 의원(한나라당)을 대표발의로 24명의 국회의원들은 4월 29일 농업용·축산용·임업용 등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시한과 자경농민 증여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시한 등을 2003년에서 2008년까지 연장기로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또한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시한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현물 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한도 5년 연장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친환경축산 프로그램 참여농가 비용 일부 지원

- 김영진 농림장관, WTO국민연대와 간담회서 밝혀

김영진 농림부장관은 친환경축산 프로그램에 일정기간 참여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비용 일부를 지원키로 약속했다.

김 장관은 지난 9일 축산회관 지하 소회의실에서 WTO국민연대 주최로 열린 '새정부 농업의 방향과 대책 마련을 위한 농림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이 같이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축산의 환경부담 요인을 줄이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축산업등록제와 연계한 친환경 축산직불제 도입을 적극 강구키로 하고, 앞으로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방위주의 체계적인 가축방역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항생제 등 잔류 위반농가 최장 3개월 출하제한

농림부,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항생물질 등 유해잔류물질 검사 결과 잔류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까지 축산물 출하를 제한하는 등 축산물에 대한 위생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부는 5월 10일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5월 28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농림부는 개정안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생물질, 중금속, 농약 등 유해잔류물질과 대장균 등 병원성 미생물에 대해 검사 결과 잔류기준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장 3개월까지 축산물 출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농가로 지정하여 연속검사를 실시하는 등 출하가축 위생상태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소·돼지 도축세 폐지법안 제출

최근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이 도축세 폐지를 주요골자로 한 '지방세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권 의원은 "소·돼지를 도살할 때 징수하는 도축세는 현재 우리 나라에서만 징수하는 조세"라며 "더구나 올해부터는 축산자조금까지 걸게 되어 축산농가의 부담이 이중으로 작용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며, 이를 해결키 위해 최근 도축세 폐지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PRRS, TGE, PED도 역학조사 실시

- 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안 마련

농림부는 4월 17일 농가 자율방역 의식고취 및 방역체계 개선을 위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개정령안을 마련하고, 각계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방역본부, 농협 등 축산관련단체는 50㎡ 이상의 가축사육 시설을 갖추고 있는 자에게 가축방역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 대상질병에 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등 제2종 가축전염병을 추가했다.

또한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서 하여금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에게 구제역·돼지콜레라, 돼지오제스키병 등에 대해서는 검사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하도록 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죽거나 병든 가축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구두로 신고되, 가축의 소유자 등의 성명 및 사육장소, 가

축의 종류 및 두수, 질병명, 죽은 연월일 등을 신고토록 하고, 예방접종 표시대상에 돼지콜레라 등을 추가키로 했다.

한편, 이 규칙은 2003년 6월27일부터 시행된다.

노 대통령, 학교급식에 국산 농축산물 사용 추진

앞으로 국산 농축산물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학교급식법개정안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권양숙 여사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사고 대책' 세미나에 참석, 올해를 '어린이 안전 원년'으로 선포했다.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어린이 안전 원년을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학교급식에 우리 농축산물 사용, 학교급식에 안전 감시제도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한편, 3월 24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신관 식당에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농촌경제를 지원하고, 생산농민의 사기를 높여 주기 위해 친환경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달 1일부터 구내 전 식당에 대해 유기농축산물을 사용토록 했다.

농어촌대책 테스크포스팀 본격 가동

농어촌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조직인 농어촌대책 Task Force팀(팀장 정명채)이 지난 4월 1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604호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농어촌대책 TF팀은 앞으로 농어가부채대책, 직불제 확충 등 핵심과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농림부나 농민단체로부터 올라 온 발굴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조정을 거쳐 농특위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2002년 비육돈 생산비 1.1% 감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02년 축산물생산비 발표

2002년도에 양돈농가들은 9월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돈가에도 불구하고 소득과 순이익이 전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5월 6일 발표한 2002년도 축산물 생산비 조사보고에 따르면, 100kg으로 환산한 비육돈 두당 경영비는 144,970원으로 전년 146,300원에 비해 0.9%(1,330원), 생산비는 154,540원으로 전년 156,180원에 비해 1.1%(1,640원)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119page 참조>

농협, 398개 조합 합병 전면 재검토

- 농협, 398개 조합 합병대상으로 선정

농협중앙회는 지난달 4월 25일 1,300여개의 지역 농협을 내년까지 900개로 합병하기로 한 조합합병 세부추진계획안을 5월 14일 전면 철회했다.

농협은 지난 4월 25일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조직·사업·경영기반이 취약한 398개 조합을 합병대상 조합으로 선정하고, 2006년까

지 900개 조합으로 규모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림부, 구제역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

농림부는 지난달 4월 30일 최근 돼지콜레라 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2차 예방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그 동안 운영해 온 ‘돼지콜레라대책상황실’을 ‘구제역대책상황실’로 개편·운영키로 했다.

구제역 대책상황실은 구제역 특별대책기간 종료일인 5월 31일까지 운영된다.

제주도, 돼지 출하농가에 장려금 지급

- 두당 A등급 10,500원, B등급 7,000원

축산물등급관정소는 지난 4월 30일 “제주도는 3월 1일부터 위생적이고 안전한 돼지고기 생산을 유도하고, 도내 수출 원료돈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구축 등 양돈산업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돼지 출하농가에 대해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올해 말까지 추진키로 한 장려금 지원은 수출가공업체와 수출규격돈 생산·공급계약을 체결한 양돈 HACCP-FCG 품질보증 지정 농가를 대상으로 A등급은 두당 10,500원, B등급은 7,000원이 지원된다.

그러나 출하한 돼지가 A·B등급을 받고, 탕박 지육중량이 78kg 이상인 암돼지 및 거세한 수돼지로서 유해잔류물질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농단협, 차기 회장에 최준구씨 선출



최준구 회장
(대한양계협회)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전국농민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15일 수원시 농민회관 회의실에서 농단협 27개 단체중 17개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최준구 회장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장에 오경욱 제주조합장 선출



오경욱 조합장
고, 중앙회 대의원에는 진길부 도드람양돈조합장을 선출했다.

전국양돈조합장협의회는 지난 4월 25일 농협중앙회에서 회의를 열고 한영섭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신입회장에 오경욱 제주양돈조합장을 선출하

검역원, 구제역 임상 및 혈청검사 실시

- 1,2차로 나눠 총 130농가 700두 실시

최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방역본부와 함께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2002년 구제역 발생지역의 양돈 및 한우농가 중에서 일부를 선정하여 구제역 임상 및 혈청검사를 실시기로 했다. 1, 2차로 나눠 실시되는 이번 구제역 임상 및 혈청검사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지역인 경기도 이천·용인·평택지역과 충북 진천지역의 65농가 352두에 대해 5월에 1차 채혈

검사를 실시하고, 경기지역과 충북지역의 65농가 348두에 대해 9월에 2차 채혈검사를 실시기로 했다.

제주산 돼지고기 일본 조기 수출 허용 건의

- 제주도, 가축방역 관련 검역담당 1개 계 신설

제주도는 지난 4월 29일 제주산 돼지고기를 일본에 우선 수출할 수 있도록 농림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제주산 돼지고기는 현재 일본 수출 여건이 충족되어 있으나 다른 지방의 돼지콜레라 발생으로 수출 재개가 안돼 돼지고기 안·등심 등 수출부위가 적체되어 수출업체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조기 수출을 위해 농림부가 일본 정부와 수출 협상을 벌여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제주도축산진흥원에 가축방역 관련 검역담당 1개 계가 신설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최근 외부로부터 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키 위해 축산진흥원에서 가축위생 업무를 분리해 가축위생연구소를 신설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결과 행정자치부가 검역담당 신설을 승인했다고 5월 14일 밝혔다.

등급판정소, 축종별 고급육 출하 농가 표창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정동홍)는 올해부터 매년 축종별로 고급육을 출하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수농가를 선발해 표창기로 했다.

등급판정소는 지난 5월 7일 양축농가의 사기진작과 고급육 생산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이같이 추진키로 하고, 오는 10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잠정 계획하고 있는 우리축산물 브랜드전 행사시 표창하겠다고 밝혔다. 양돈의 경우 상위(A·B)등급 이상을 80% 이상 받은 농가로 소규모 1001~2000두, 중규모 2001~4000두, 대규모 4000두 이상으로 출하 두수 별로 구별·심사하여 우수농가를 선발한다.

“벌침으로 가축 질병 막는다”

안동시 농업기술센터는 벌침이 돼지 등 가축의 질병 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항생제를 대체하는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올해 축산농가 5곳을 대상으로 봉독을 이용한 가축 생산성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주)하림 익산공장에 불로 4천여 억원 피해 발생

지난 12일 새벽 2시쯤 전북 익산 망성면 소재 닭고기 가공업체인 (주)하림 도계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5만4,000㎡ 가운데 2만8,000㎡가 불에 타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하림은 이날 오후 5시30분부터 전북 익산 시청에서 열린 종합대책회의에서 “화재 발생은 전기 누전으로 추정되며, 이번 화재의 직접 피해액이 895억원 정도며, 영업손실 등 간접적인 해액까지 합산하면 모두 4천여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1/4분기 도축실적 전년 동기비 3.7% 증가

2003년 1/4분기(1월~3월) 돼지 도축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농림부가 발표한 1/4분기 돼지도축실적에 따르면 총 385만1,462두로 전년 동기 371만 3,962두보다는 3.7% 증가한 반면, 전분기('02년 4/4분기) 424만1,079두 보다는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고기 수입량 지속적인 '증가세'

지난 2월 3,839톤인 돼지고기 수입량이 3월에는 5,044톤, 4월에는 6,531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농림부가 발표한 4월 돼지고기 수입검역실적에 따르면 총 6,531톤으로 전월 5,044톤보다 29.5%인 1,487톤이 증가한 반면, 전년 같은 기간 7,525톤에 비해서는 13.2%인 994톤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냉장육의 경우 22톤으로 전월 보다 69.2%인 9톤이 증가하였고, 냉동육도 6,509톤으로 전월 보다는 29.4%인 1,478톤이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13.1%인 980톤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위별 수입현황을 보면 삼겹살이 4,963톤으로 가장 수입이 많았으며, 갈비 536톤, 목심 514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별로는 벨기에산이 1,700톤으로 가장 많았다.

축기연, '축산시설환경 용어사전' 발간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소장 김경남)는 축산시설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전문용어의 정립을 통한 축산시설환경분야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시설환경 용어사전'을 발간했다. **양돈**